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과제입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은
인권평화사회의 초석을 놓는
소중한 일입니다.
100만 피학살 원혼들이
해원하고 역사와 사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진실을 밝히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서울 용산구 후암동 445-8번지 3층(140-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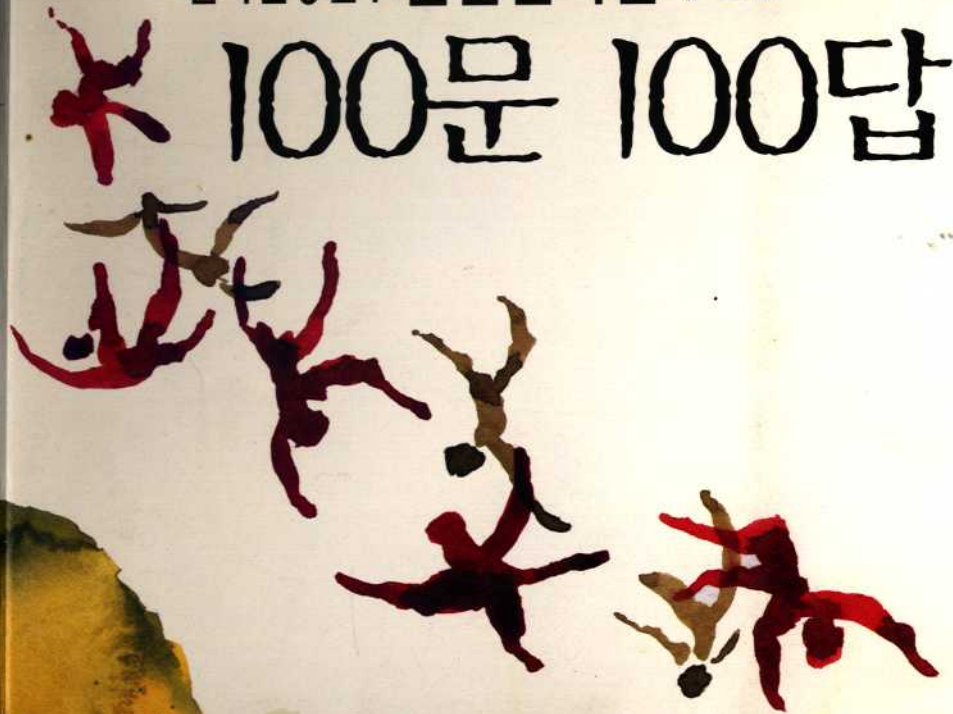
전화 02-773-5158, 773-6158 전송 02-773-5158

<http://www.genocide.or.kr> genocide2002@hanmail.net

후원 우리은행(최흥섭) 350-094925-02-101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에 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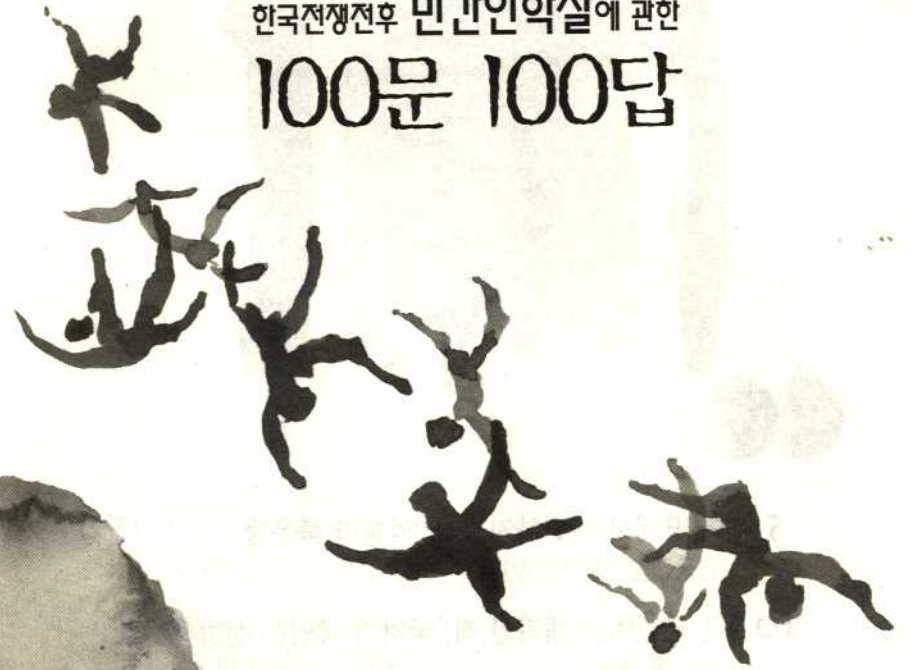
100문 100답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에 관한

100문 100답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차례

- 5 이 땅에서 해원하지 못한 억울한 죽음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개요)
- 10 온 국민이 잠재적인 적! 국가가 국민을 선별하다
(학살의 배경)
- 15 불안정한 해방정국 속에서 학살은 이미 시작되었다
(6·25 이전의 학살)
- 19 학살은 의심할 바 없는 최상층의 지시
(예비검속자, 보도연맹원, 형무소 수형인 학살)
- 23 흰 옷 입은 사람은 무조건 쏘 죽여라!
(미군에 의한 학살)
- 26 인민 치하에서 살아남은 게 죄?
(부역혐의자 학살)
- 28 살인면허 : 작전 지역 내의 모든 인간은 죽여도 좋다
(작전으로서의 학살: 제2전선학살)



- 31 풀리지 않는 의문, 잔혹한 진실
(기타 학살)
- 33 학살 문제 외면하는 우리 사회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유족회의 역사와 활동)
- 37 학살 문제의 해결을 늦추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직무유기
(진상규명 노력)
- 43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
- 48 과거청산은 시대의 명령
(과거청산 입법을 위하여)
- 52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
(지금, 여기, 우리가)
- 55 부록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 활동일지



이 땅에서 해원하지 못한 억울한 죽음들

1. 마산 여양리, 고양 금정굴, 경산 코발트광산, 지리산, 불갑산 등지에서 유골이 다량 발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된 사연이 궁금합니다.

한국전쟁 당시 집단학살당한 민간인들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피학살자들 중 대다수가 우리 국군과 경찰, 미군, 우익단체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점이고, 또 그 대부분이 우발적이 아닌 조직적 학살의 피해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리산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부역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형무소에 수감돼 있었다는 이유로, 혹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혹은 흰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학살당했습니다.

2. '민간인학살'은 '양민학살'하고는 다른 건가요?

여기서 '민간인학살'은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국군, 경찰, 미군, 우익단체, 혹은 인민군에 의해 비무장 민간인이 집단학살된 사건을 말합니다. 흔히 '양민학살'이라고 말하는 사건들이지요.

하지만 '양민'이라는 말에는 비무장 민간인이라는 의미 외에 '사상적으로 건전하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좌익이거나 좌익혐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적법한 절차 없이도 죽일 수 있다, 즉 '빨갱이는 무조건 죽여도 좋다.'는 뜻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무서운 말인 셈입니다. 하지만 설사 좌익이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없이 학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전시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이승만 독재정권은 '양민증'이라는 것을 발행하여 독재권력에 우호적이거나 침묵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을 나누었고 이 '증'을 갖지 않은 국민들을 탄압했습니다. 또 지난 우리 역사에서 독재정권이 독재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언제나 '빨갱이'라는 허울을 씌워 탄압, 고문, 살해했던 점을

상기한다면 '양민'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 하겠습니다.

3. 전쟁중에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닐까요?

'전쟁은 언제나 학살을 수반한다.'는 말은 어디까지나 전쟁의 참혹성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이지 학살을 정당화하는 말은 아닙니다. 전쟁중인 적국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민간인은 함부로 죽일 수 없으며 또 적군이라도 항복 의사가 분명하면 처형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입니다. 이는 아무리 극단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은 최후까지 존중받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상식에 입각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 당시의 민간인학살이 더 충격적인 것은 대부분 적이 아니라 우리 군경에 의해 우리 국민이 집단학살당한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당시 이승만 정권은 다수 국민을 '잠재적인 적'으로 규정하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 또는 묵인했습니다. 이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민주권의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비추어서도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전쟁범죄이자 국가폭력입니다.

4. 민간인학살이라고 해서 아무나 죽인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나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 학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6·25 직후부터 예비검속된 좌익경력자 및 국민보도연맹원, 형무소 재소자 학살은 이미 7월 초부터 진행되었고 9·28 수복 후에는 부역자 색출이라는 명분하에 인민치하에서 살아남은 주민들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또한 빨치산이 은거하던 산 주변의 주민들은 빨치산 내통혐의, 또는 작전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학살의



대상이 되었으며, 피난민들도 그 속에 인민군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탄 세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학살된 사람들 중에는 갓난아기와 부녀자,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한국전쟁 당시의 무수한 민간인학살은 권력이 자기 입맛에 맞는 국민을 선별하고 살아남은 이들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죽인 사람은 누구인가요?

100만 피학살자 중 대다수는 우리 국군과 경찰, 우익단체, 그리고 미군에 의해 학살당했습니다. 미군은 피난민임을 알면서도 무차별 폭격을 일삼았으며, 형무소 수감자와 예비검속인 처형은 군경 합동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빨치산 토벌을 목적으로 창건된 국군 11사단의 경우 지리산, 백운산 주변 마을 주민들을 대량학살하여 '학살부대'라는 이름을 얻었을 정도로, 부역혐의자 학살은 경찰과 우익단체가 주도했습니다. 또 일부는 인민군과 지방 좌익에 의해 학살당하기도 했습니다.

6. '보도연맹'은 좌익 조직 아닌가요?

1949년 결성된 '국민보도연맹'의 취지는 과거 좌익 경력을 가진 사람이나 그 가족을 '도와서 올바른 데로 인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정권은 정권에 반대한 이들 모두를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시켰고, 또 지역에서는 할당된 수를 다 채우지 못하자 사상이나 활동과 무관한 주민들을 대거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시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밀가루 배급 등을 미끼로 연맹원을 모집하고 본인의 동의 없이 가입원서에 도장을 찍어 보고하는 등 순진한 농민들이 본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연맹원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들 보도연맹원은 전쟁 발발 직후 거의 모두 예비검속되어 학살당했습니다.

7. 전쟁 발발 후 '예비검속'의 대상이 된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해방 직후에 좌익활동을 했거나 좌익활동 혐의가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입니다. 또 국민보도연맹원도 전원 예비검속되었습니다.

8. 형무소 재소자들은 범법자 아닌가요? 이 사람들도 민간인학살에 포함되나요?

형무소 수감자들을 학살한 것은 이들이 인민군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형무소에는 아직 형을 확정받지 않은 미결수도 다수 있었고 기결수 중에는 단순 잡범도 많았습니다. 미결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결수들 역시 자신의 죄에 따라 일정기간의 징역형을 살도록 판결받은 것이지 사형을 언도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적에게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쟁 발발 직후인 7월 초부터 약 한 달 사이에 전국 모든 형무소의 수감자들이 불귀의 객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렸고, 그 과정 역시 명백한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학살도 당연히 민간인학살에 해당합니다.

9. 부역자 처벌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부역자 처벌의 아이러니는 죄가 가벼울수록 죽을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인민치하에서 적극적으로 인민군에 협력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민군이 퇴각할 때 따라서 월북했습니다. 남아 있던 사람들은 주로 피난갈 새도 없이 인민치하를 맞고 생존을 위해 시키는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민치하에서 살아남은 것이 죄가 되리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을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 소극적인 부역자들은 경찰서나 지서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은 뒤 일부 훈방되고, 일부는 서울 등지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고 극소수가 사형, 징역 등의 형을 언도받았고, 대부분 훈방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비호 아래 우익단체원과 치안대원들이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지키지 않고 부역혐의자나 월북한 이가 있는

집안의 가족들을 잡아다가 인근 야산이나 강변 등지에서 무차별 집단학살하는 일이 광범하게 벌어졌습니다. 즉, 적극적인 부역자는 월북하여 생존하고, 소극적인 부역자는 재판을 받은 뒤 대부분 생존했는데, 혐의가 미미한 사람이나 혐의자의 가족들은 무차별 학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10.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조금은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닌가요?

빨치산을 토벌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인근 거주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군은 작전명령을 통해 “작전지역 내의 인원은 전원 총살하라.”는 지침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작전명령이 뜻하는 것은 작전지역 내의 주민들은 빨치산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죽여 없애고, 또 빨치산의 식량과 은 거지가 될 수 있는 주민들의 재산도 전소하라는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마을 주민들에 대한 살인면허였습니다.

11. 노근리 사건 같은 미군에 의한 직접 학살도 많이 있나요?

미군 폭격에 의한 피해가 없는 지역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은 더 이상 폭격할 땅이 남아 있지 않아 공격할 곳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갈 지경이었고, 남한 지역도 전선과 무관한 무차별 폭격이 난무했습니다. 미군의 이런 행태는 인종차별적 인식에 바탕한 작전명령의 결과로서, 당시 미군에게 한국 국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고 적과 똑같은 피부색, 비슷한 차림을 하고 있어 작전에 혼란만 주는 사실상의 적으로 규정되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미군이 피난민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폭격, 학살을 자행한 사례는 노근리 사건, 포항 함포사격 등 최근에 기밀해제된 미 문서와 증언들을 통해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잠재적인 적! 국가가 국민을 선별하다

12. 당시에 학살이 그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한국전쟁 전후의 학살은 냉전체제 형성기에 발생한 정치적 학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은 한반도에서는 새로운 국가건설을 위한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남한 인구의 70% 이상은 사회주의 계열의 정치체제를 선호하는 경향이었으나, 1948년 남한 단독정부(대한민국) 수립과 함께 좌익활동은 사실상 불법행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북한에서는 엄격한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국민들의 광범한 지지를 받았던 데 반해서,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재산과 공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친일파 청산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승만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불신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다양한 투쟁으로 발전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정부수립 직후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정치활동을 묶고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하여 좌익 전력자들을 회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적극 찬동하지 않는 수많은 민중들을 불법학살하면서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미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정치적 희생양이 되었고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정치범을 포함한 형무소 재소자들과 국민보도연맹원에 대한 일제 검거와 학살이 자행됐던 것입니다. 보도연맹원 등에 대한 학살은 이후 좌우 양쪽에서 부역자 처벌을 명목으로 한 보복학살의 연쇄고리를 형성하여 학살의 규모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또한 공비 토벌이나 부역자 색출 명분으로 초도화 작전이 구사되는 등, 국가권력이 학살에 앞장서고 이를 정당화하는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성격이 짙었습니다. 또한 미군이 한국전에 본격 개입한 이후에는 무차별 폭격 및 기총소사에 의한 대량학살이 자행되었는데, 당시 미군은 피난민에 대한 폭격도 서슴지 않는 등 '흰 옷 입은 자'를 모두 사실상 적으로 간주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한에서만 약 100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되는 참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13. 한국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했다고요?

전쟁 발발 전에 이미 10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 4·3사건으로 약 3만 명, 여순사건으로 전남 동부 일원에서 약 1만 명이 학살되었고, 이후 전개된 빨치산 토벌 작전으로 지리산, 백운산을 비롯한 소백산맥 일대의 많은 주민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1946년 대구 10·1사건 당시에도 대구 경북의 많은 주민들이 학살당했고, 같은 해 화순탄광 노동자들을 미군 헌병이 학살한 사건, 울릉도와 독도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부에 대한 미군 폭격 등 크고 작은 피해가 많았습니다. 나아가 광란의 살육현장에서 살아남은 이들도 이후 강제로 보도연맹에 가입되어 한국전쟁 발발 직후 대부분 학살당하고 맙니다.

14. 국가보안법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었다니 놀랍습니다.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하여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보다는 정권안보에 악용돼온 법입니다. 하지만 그 태생을 살펴보면 악용되었다기보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의 수립은 통일된 민족국가를 염원하는 수많은 민중들의 기대를 저버린 반역사적, 반민족적 행위였습니다. 1948년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그밖의 많은 단선단정 반대투쟁은 그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이승만 정권은 정권안보를 위해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고(1948년 12월 1일) 국민보도연맹을 결성하기에(1949년 6월 5일) 이릅니다. 즉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이후 군사독재권력이 반공을 빌미로 민주인사 탄압에 이 법을 남용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더욱 커져갔던 것입니다.

15. 해방이 되었는데 친일파가 독립운동을 학살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민간인학살은 해방과 국가건설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방 후 3년간 빼앗긴 대지의 척박함을 딛고 이 땅에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주권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민중들의 열의는 매우 높았으나 해방과 함께 진주한 외세에 의해 사회는 또다시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미군정은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친일 관료들을 대부분 재등용했고 친일파 척결에 앞장섰던 반민특위는 오히려 해체되는 등, 친일파들은 대부분 일제강점하의 지위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마다 지역 유지로 행세하던 친일파들이 여전히 권세를 누리면서 타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고향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미군정에 빌붙어 예전의 지위를 계속 누리던 친일파들은 전쟁이 발발하자 좌익계는 물론 민족주의자나 우익계 독립운동가들까지 ‘빨갱이’로 몰아 학살합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이렇게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또 군사독재정권의 앞잡이로 기회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꺼빠만 리’들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민간인학살 사건 등 자신들의 죄과를 은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16.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해방 후 이 땅의 민중들이 원한 것은 통일된 자주독립국가의 건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고 미군정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면서 민중의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 정치세력이 정권을 규탄하기에 이르렀고, 이승만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협조적인 친일파와 친미파에 기댄 채 민중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정치적 반대세력과 무고한 민중들을 학살, 제거하게 됩니다. 정권은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이러한 대학살을 정당화합니다. 결국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은 권력 장악과 유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반공 이데올로기의 결합을 배경으로 하여 일어난 것이었고, 이렇게 뿌리내린

반공체제는 이후 50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중심축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17. 미군정과 미군사고문단은 이런 사실을 몰랐나요?

롤링스 에머리치(Rollings S. Emmerich) 중령은 <1950년 한국전쟁 초기의 역사>란 문서에서 1950년 7월 1일 부산, 대구형무소 수형인 8천여 명을 처형키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군 제25 CIC 분견대는 1950년 11월 2일자 활동보고서에서 “1950년 7월 1일 한국정부의 지시로 대전과 인근의 민간인 1400여 명을 학살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확인된 내용은 형무소 수감자 학살을 이승만 정권의 최측근인 국군 제3사단 23연대장 김종원이 1950년 7월 1일에 이미 기획 집행했고, 실행 이전에 미군정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는 2004년 7월 부산일보가 발굴, 특종 보도한 미국측 문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18. 학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학살의 일차적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고 국민의 군대와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방 후 3년간의 미군정 기간과 이후 미군사고문단의 개입, 그리고 1950년 7월 초 작전지휘권이 미군에 넘어간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노근리 사건 등 미군의 직접 학살은 물론 이 기간에 자행된 모든 학살사건에 대해서도 미국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간인 학살은 제네바협약에 반하는 전쟁범죄이며 국제법상으로도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19. 이러한 학살 사실이 당시에 알려졌나요?

당시의 학살은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학살당한 이의 가족이나 친지, 이웃은 물론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모든 국민들에게도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신에서 이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는데요.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공비토벌을 목적으로 1950년 2월 1천여 명의 주민을 학살한 거창, 산청, 함양사건을 예로 들자면, 거창 출신 신중목 의원이 임시수도가 있던 부산의 국회에서 이를 폭로하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책임자가 군사법정에 회부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을 접한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영국의 한 신문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는 악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중군기자인 앨런 워닝

턴은 대전형무소 산내학살을 직접 목격하고서 <I saw the Truth in Korea(나는 한국에서 진실을 보았다)>라는 소책자를 펴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주간지 <선데이 마이니치>와 <주간조일> 등은 부산 수장 사건을 기사로 다루면서 '철사로 엮인 시체더미가 어장의 그물에 걸려와 조업을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어부들'에 관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20. 전쟁범죄라면 종전 후 재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어야 하지 않나요?

민간인학살은 분명히 전쟁범죄입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의 경우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전투가 종료되었고 이후 전쟁범죄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전쟁은 내전과 국제전의 성격을 모두 띠고 있는데, 이후 세계가 냉전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이데올로기 대립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반도가 대치의 극단에 서게 되면서 전쟁범죄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은 정치의 연장이어서 공과나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사후처리를 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니다. 민간인학살 등 전쟁범죄의 해결은 사실상 책임주체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의지를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며 또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모아져야만 합니다.

21. 그렇게 학살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요?

지난 1960년 4·19 직후에 활동한 전국유족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피학살자의 수가 약 114만 명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당시의 유족회 자료를 5·16 쿠데타 세력이 모두 수거해가 그 근거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후 민간에서 실태조사 및 자료추적을 통해 추산한 피학살자의 수는 약 100만에 이릅니다. 그중 미군, 국군, 경찰, 그리고 우익단체 등의 비정규무장대에 의한 학살이 대다수이며, 인민군, 빨치산, 지방 좌익에 의한 학살에 의한 학살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국민보도연맹원, 좌익경력자 및 그 가족,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 형무소 재소자, 빨치산 활동지역 인근 마을 주민, 피난민 등, 사실상 국민 모두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들은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지만 그중 세간에 어느 정도 알려진 일부 사건을 시기, 지역, 유형별로 하나씩 선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불안정한 해방정국 속에서 학살은 이미 시작되었다

22. 해방군인가? 점령군인가? 노동자 대학살(화순탄광 노동자 학살)

1946년 8월 15일 광주 8·15 기념식에 참석하려던 3천 화순탄광 노동자들을 미군 제40사단이 토끼몰이하듯 쫓는 과정에서 김판석 씨 등 여러 명이 미군 총에 맞아 사망 또는 실종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공장 자주관리를 추구하던 당시 전국노동조합평의회에 대한 미군의 와해 작전의 일환으로, 해방 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자행한 최초의 민간인학살 중 하나입니다. 이 사건 후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23. 전선이 형성된 적이 없는 독도에도 폭격은 쏟아지고(울릉도, 독도 폭격)

독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중이던 어선에도 미군은 전쟁 발발 전부터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여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알려진 것만도 1947년 4월, 1948년 6월 8일, 1952년 9월 15일, 1952년 9월 22일 네 차례입니다. 우리 나라의 동쪽 끝에서 일어난 독도 학살은 전선과 무관한 비전투 지역에





서 발생한 것이 특징인데, 미군은 조업 어부에 대해 어떤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인종차별적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24. 대구의 진보인사를 썩쓸어하다.(대구 10·1사건)

대구 지역 중심의 1946년 '10월 항쟁' 이후 미군정과 경찰은 수천의 관련자들을 검거하여 그중 수백 명을 처형했고, 진압과 검거 과정에서도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습니다. 또 항쟁에 연루되어 형무소에 갇혀 있던 이들과 풀려났다가 뒤에 국민보도연맹에 강제 가입된 이들도 전쟁 발발 후 모두 학살당했습니다. 대구시와 인근의 가창, 월배, 본리동, 성서, 칠곡, 경산 코발트 광산 등이 이와 관계있는 주요 학살지입니다.

25. 제주 4·3사건도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학살 사건인가요?

제주 4·3사건의 비극은 1947년 3.1절 행사중인 제주도민을 미군정이 강제해산시키고 이들을 향해 발포하면서 시작됩니다. 이 발포사건에 항의하여 곧 총파업이 단행되었고 경찰과 서북청년단은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합니다. 결국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1948년 4월 3일 탄압에 항의하고 단선단정에 반대하며 봉기를 하게 되고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개방될 때까지 무장대와 토벌대는 끊임없이 무력충돌을 거듭합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3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합니다. 당시 미군정은 얼마 안 되는 무장대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민 전체를 상대로 '빨갱이 사냥'에 나섰다. 육지에서 온 토벌대는 약탈, 폭행, 방화, 살해 등의 범죄를 수없이 저질렀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제주도를 없애더라도 미군정에 빌붙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고 이는 당시 경무대장이던 조병옥이 "대한민국을 위해 전 도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버려도 좋다."라고

말한 데서도 드러납니다. 요컨대 제주 4·3사건은 대표적인 민간인학살 가운데 하나입니다.

26. 여순사건은 군대의 반란 사건 아닌가요?(여순사건)

1948년 10월 19일 당시 여수에 주둔중이던 국방경비대 14연대는 제주 4·3사건의 진압 출동 명령을 받고 '같은 민족에게 총을 쏠 수 없다.', '미제 침략 반대', '단선단정 반대'를 내걸고 부대를 이탈합니다. 반군은 20일에 여수시를 장악하고 곧이어 순천, 구례 등 전남 동부지역 전체를 장악합니다. 하지만 10월 27일 진압군이 여수시를 완전 진압하면서 사건은 종료되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학살은 오히려 진압 이후에 대대적으로 자행되는데, 진압군은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민간인을 잔인하게 학살했고 산으로 들어간 잔류부대와 공비들을 소탕한다며 마을 주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학살당한 민간인의 수는 여수, 순천, 구례, 광양, 보성, 고흥 등지에서 약 1만 명에 이릅니다.



27. 지리산에 사는 죄?(산청, 함양)

빨치산 토벌차 지리산에 온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는 1949년 7월 18일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 설통바위 부근에서 매복중이던 공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국군은 이 사건을 통비분자에 의한 것으로 보고 200여 명의 마을주민을 통비분자로 몰아 학살합니다. 이 밖에도 여순사건 이후 지리산 일대의 빨치산 토벌군에 의한 주민 학살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리산에 사는 '죄'밖에는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28. 이발사의 외상장부가 살생부가 되다.(함양 도북마을 학살)

도북마을 학살은 1949년 9월 20일 낮 12시경 마을 주민 32명이 수동면 당그래산에서 빨치산 내통 혐의로 학살당한 사건입니다. 사건 발생 직전에 마을 이발사 정주상이 경비병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넘겨졌는데 당시 지서장 최

홍식은 빨치산 내통자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끌어들이는
 참이었습니다. 결국 이발사의 외상장부에 적힌 마을 주민 32명이 고스란히
 산으로 끌려가 학살당했습니다.

29. 전신주보다 못한 목숨(고흥 전신주 사건)

1949년 5월 3일 밤 전남 고흥군 과역면 도천리와 남양면 노송리 경계 지
 점에서 전신주 약 10주가 절단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전남 동부에
 서는 빨치산은 토벌대의 연락망을 교란하기 위해 전선을 절단했고 이에 경찰
 들은 전신주마다 주민 한 사람씩을 붙여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선
 절단 사건이 발생하면 주민들을 빨치산 내통자로 몰아 살해하곤 했습니다.
 고흥경찰서에서도 5월 9일 마을 주민을 다수 연행하여 고문한 후 주민 8명
 을 학살했는데, 전남 동부 전역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30. 토벌대인가, 학살부대인가?(문경 석달마을 학살)

석달마을 학살은 1949년 12월
 24일 정오 24가구에 127명의 주민
 이 거주하던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
 면 석봉리 석달동에 국군 2사단 제
 25연대 3대대 7중대 2소대의 무장
 군인 70여 명이 느닷없이 들이닥쳐
 자신들에게 대접이 소홀하다는 것
 을 트집잡아 주택 24가구 전체를
 불태우고 주민 전체를 마을 앞 논
 바닥과 마을 뒤 산모퉁이 두 곳
 에 모아놓고 학살한 사건입니다.
 마을 뒤 산모퉁이에서는 석봉리 동
 회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던 청장년
 들과 학교에서 하교하던 어린 초등
 학생들까지 학살되었는데, 단 2시
 간 만에 마을 주민 86명이 학살당
 했고 이중 32명은 15세 미만의
 어린이였습니다.



학살은 의심할 바 없는 최상층의 지시

31. 옥녀봉에서 죽어간 사람들(청원 옥녀봉 학살)

1950년 7월 9일(혹은 11일) 국군이 청원군 북위면 옥녀봉에서 괴산군 사리
 면, 칠성면, 불정면 등지에서 끌고 온 보도연맹원 800여 명을 학살했습니다.
 피학살자들이 옥녀봉 골짜기에 들어섰을 때 이미 헌병과 경찰 등 40여 명이
 기관총 등을 준비한 채 대기하고 있었고, 이후 4시간 동안 죽음의 행렬이 계
 속되었습니다. 골짜기에 핏물이 냇물처럼 흐르고 인근 마을의 개들이 옥녀
 봉에서 배를 채워 밥을 안 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청원군의 다른 지역을 포
 함하여 충북 전체에서 학살된 보도연맹원은 3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습니다.

32. 반세기 동안 기름덩어리에 파묻힌 유골들(경산 코발트광산 사건)

1950년 7~8월에 경북 경산의 코발트 폐광 수직갱도와 인근 골짜기에서
 대구형무소 재소자와 경산, 청도 지역의 보도연맹원 약 3500명이 군경에 의
 해 학살당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하루 10대 정도의 군용 트럭에
 사람들이 실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빈 트럭이었다고 합니다. 학살은 약 열흘
 동안 진행되었는데, 포승줄에 묶여 산 채로 수장되기도 했고 흉기로 가격당
 하거나 기름에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경산 코발트광산에는 지금까지도 수습
 되지 않은 유골들이 반세기 전의 한을 그대로 품은 채 기름덩어리에 파묻혀
 있습니다.

33. 꼬챙이 들고 다니던 CIC, 일본군보다 무서워(경남 보도연맹 학살)

1950년 7~8월경 경남 일대에서는 보도연맹에 의한 학살이 광범위하게 자
 행되었습니다. 양산에서는 목화창고에 감금되었던 350명이 사배골짜기에서
 학살당했으며, 진영에서는 특무대와 경찰이 주동광산과 숯굴에서 300~400
 여 명을 학살하고 냉정고개에서도 335명을 학살했습니다. 울산에서도 특무
 대와 경찰이 울주군 온양읍 대원산, 상북면 지내리, 웅촌면 오복리 등지에서



869명을 학살했습니다. 경남 지역은 1960년 유족회 활동 당시 활발한 진상 규명 운동이 펼쳐진 지역인데, 양산 사배골짜기와 진영 냉정고개, 울산 대운산 골짜기에서 유족들이 유골을 발굴하여 합동묘를 조성했으나 5·16 이후 쿠데타 세력이 무덤을 파헤치고 유골을 불사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밖에 마산, 진주, 함안, 창녕, 사천, 진양, 하동, 밀양, 삼랑진, 거제, 통영, 충무, 창원 등지에서도 학살이 자행되었는데 최근 태풍 '루사'로 실체가 드러난 마산 진전면 여양리 학살은 진주 보도연맹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도연맹원을 예비검속한 주체는 주로 경찰이었지만 학살 명령과 집행은 주로 육군 헌병대와 미 방첩대(CIC), 해군 정보부(G-2)가 맡았습니다. 유족들도 CIC가 떴다 하면 몸을 숨길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34. 물귀신이 된 원혼들(거제 학살)

1949년 4월부터 1950년 7월 25일까지 거제 일대에서는 학살사건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 기간에 학살된 사람 중 787명이 확인되었습니다. 1949년 4월과 1950년 4월 사이에 거제 지역의 야산대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인근 마을 주민들이 다수 학살되었고, 6·25 이후에는 예비검속자와 보도연맹원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학살자로는 백골, 호림, 백호, 비호부대 등 국군과 우익단체인 민보단, CIC(방첩대), HID(헌병대), G-2(해군 정보부)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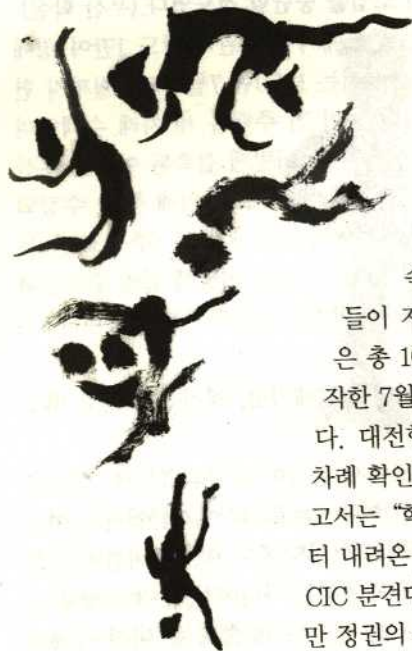
35. 떠내려온 시신에 대마도 어부들이 조업을 중단할 정도였다.(부산 학살)

인민군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부산에서 학살된 사람도 1만여 명에 이릅니다. 전쟁중 임시수도가 있던 부산에서는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헌병, 경찰, 청년방위대원 등과 우익청년단 등이 전 주택을 세 차례 수색하며 좌익경력자, 보도연맹원들을 예비검속했습니다. 이렇게 검속된 이들은 부산 형무소 수감자들과 함께 8~9월 사이에 특무대, 경찰 등에 의해 총살, 수장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발행된 주간지 <선데이 마이니치>와 <주간조일> 등에서는 부산 앞바다에서 철사로 엮여 떠내려온 시체가 어망에 걸려 고기잡이를 못하겠다고 항의하는 대마도 어민들의 이야기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36. 무인도에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갈매기섬, 애기섬 그리고 백조일손 등)

2002년 진도 인근의 무인도인 갈매도에서 유골이 발굴되었는데, 이들은 해남에서 끌려온 보도연맹원이었습니다. 여수 앞바다의 애기섬에서도 여순 사건으로 보도연맹원이 된 사람들이 끌려와 학살당했습니다. 예비검속자 학살은 4·3사건이 일어난 제주도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4·3의 광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제주읍, 서귀포, 성산포, 모슬포 등 여러 곳에서 예비검속 되어 수장, 학살되었습니다. 이중 송악산 첫알오름 탄약고터에서의 예비검속자 학살을 '조상은 백인데 자손은 하나뿐'이라는 뜻으로 '백조일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7. 골령골, 죽음의 구덩이, 비어져 나온 손, 발, 머리(대전 산내 학살)

1950년 7월 초 대전 산내 골령골에서는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의 정치범, 일반 잡범, 미결수와 예비검속자들 3000여 명이 미군과 지역 유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살되었습니다. 학살은 총 10일간 진행되었는데 군경이 후퇴를 시작한 7월 14~16일까지도 학살이 계속되었습니다. 대전형무소 학살은 미군 문서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되었는데, 미 육군 중령 에드워드의 보고서는 “학살은 의심할 여지 없이 최상층으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미군 제25 CIC 분견대의 활동보고서는 “수형인 학살은 이승만 정권의 최측근인 김종원이 기획하여 미군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8. 대구에서 부산으로? 형무소에서 사라진 사람들은 어디에?(형무소 수감자 학살)

한국전쟁 발발 후 인천, 수원, 대전, 공주, 대구, 부산, 마산, 진주, 김천, 목포, 여수, 전주, 광주 등 전국의 거의 모든 형무소에서 학살이 자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규모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 김천에서는 학살지와 유골이 발견되어 학살 사실이 확인되었고, 1960년 4대 국회의 양민학살진상조사특위는 대구형무소에서 1,402명, 마산형무소에서 1,681명이 학살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형무소에서 부산 형무소로 이감되었다는 1,172명이 부산에 도착하지 않은 채 도중에 학살된 사실이 2002년 <국민일보>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은 무조건 쏘 죽여라!

39. 소달구지와 함께 가고 있는 주민들을 포위하라. 반복한다. 그들을 포위하라.(노근리 사건)

노근리 사건은 1999년 9월 두 건의 미국 비밀 문서와 당시 학살에 가담했던 군인의 증언을 토대로 AP통신에 의해 공개된 후 전세계에 알려졌습니다. 1950년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미군이 피난 가던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주겠다고 끌고 가다가 폭격, 기총소사로 400여 명을 학살한 것입니다. 당시 7기갑연대의 미군 중위였던 로버트 앤 캐롤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 사건은 우리가 민간인이건 군인이건 그 누구도 통과시키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한 사람도 전선을 넘어오지 못하게 하라, 전선을 넘어오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40. 곡계굴의 잠들지 않는 통곡소리(단양 곡계굴 사건)

1951년 1월 단양군 영춘면 주민 가운데 미처 피난을 가지 못한 노인, 어린 아이들과 영월 등지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가다 길이 막혀 더 내려가지 못한 강원도 사람들 등 줄잡아 400여 명이 곡계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1951년 1월 20일 오전 10시쯤, 미군 비행기 4대가 갑자기 곡계굴을 향해 4시간 동안 집중 폭격을 가했고 피난민들은 흰 옷을 흔들며 피난민임을 알렸으나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폭탄 파편이나 기관총에 맞아 쓰러졌으며 좁은 굴을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 대부분이 질식사했습니다.

41.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을 향한 미군의 폭격(익산)

인민군이 수원 근처에 있던 1950년 7월 11일, 전시 비상 상황에 대한 교양 교육을 받고 휴식중이던 기관사들은 상공에 나타난 비행기에 성조기가 그려진 것을 보고 태극기를 흔들며 아군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B29 전폭기 2대가 이리역(지금의 익산역) 기관차 사무소, 송학동 민가, 평화동 호남선 철길과 변전소 등을 무차별 폭격했고 이로 인해 300여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습니다.

42. 헤이븐 호의 함포사격(포항 폭격)

미 해군기록도서관의 태평양함대 소속 구축함 헤이븐 호 전투일지에 따르면 1950년 9월 1일 오후 2시 8분 해안함포사격통제반으로부터 포항 여남동 송골계곡 피난민에 대한 함포사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헤이븐 호는 육안으로도 피난민임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목표물이 인민군이 아니라 피난민이라는 사실을 사격지휘대에 알렸으나 지휘대는 인민

군이 섞여 있다는 첩보가 있다며 재차 포격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해변 백사장에는 당일 새벽 포항시내로 들어온 인민군을 피해 포항지역 주민들 1천여 명이 피난길에 나선 중이었고, 이 폭격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포항 일대에서는 1950년 7월부터 10월 사이 곳곳에서 미군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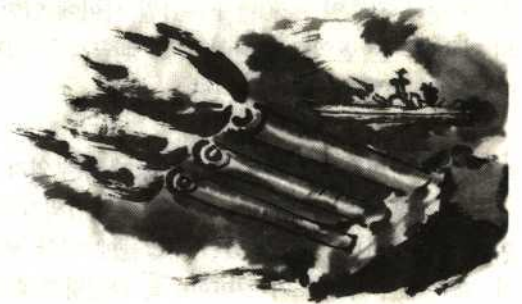
43. 팔다리가 잘린 시신들이 즐비했다.(사천 조장리, 마산 곡안리, 진주 등 폭격)

1950년 8월 2일 사천시 곤명면 조장리 앞 하천 제방에 300여 명의 피난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공에 정찰기가 나타났던 사라진 지 30분쯤 지난 후 미군 폭격기 4대가 폭격, 기총사격하여 15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마산에서는 1950년 8월 11일 진전면 곡안리 재실에 모여 있던 피난민을 폭격, 기총사격하여 학살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8월 10일 밤 미군이 통역관과 함께 재실을 찾아와 이들에게 피난을 권했다는 점입니다. 피난민임을 명백하게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11일 아침 인민군과의 교전에 광분한 미군이 피난민 속에 인민군이 있다며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것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진주 곳곳에서 피난민에 대한 폭격이 자행되는 등, 경남 일대에서 유사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44. 더 이상 폭격할 곳이 없다?(북한 지역 폭격)

미군의 폭격은 군사시설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민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초 6개월 동안 미 극동 공군 폭격 사령관을 지낸 오도넬은 맥아더 청문회 증언에서 중국군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북한의 5개 주요 도시(평양, 성진, 나진, 원산, 진남포)가 모두 파괴되었다며 “이름을 붙일 만한 모든 것이 파괴되었고, 더 이상 목표물

이 없었다. 평양 시내는 허허벌판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자비한 폭격이 정전 1분 전까지도 계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민 치하에서 살아남은 게 죄?

45. 식량 문제도 있고 해서 죽어버렸다?(강화에서의 학살)

강화 지역에서는 1950년 9·28 수복 후인 11월경부터 1951년 1·4 후퇴 직 후까지 선원면 냉정리 찬우물터, 길상면 온수리 공설운동장 부근, 강화대교 갑곶나루터, 옥림리 옥계갯벌 등 곳곳에서 인공치하의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학살이 자행되었고 피해자의 수는 수백 명에 이릅니다. 학살은 경찰의 방조 아래 우익청년단인 '강화향토방위특공대'가 저질렀습니다. <중앙일보>에 연재된 '민족의 증언'(1972년 7월 17일)에서 특공대장 최중석은 "1월 7일 인천형무소에 수감돼 있다가 석방된 공산당원 100여 명을 생포, 그중 약 절반인 60여 명을 식량문제도 있고 해서 처형했다."고 당당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46. 저기, 금정 구렁이에 가서 다 죽었다.(고양금정굴 학살)

1995년 고양시 탄현동 일제 시대에 금을 캐던 수직폐광굴인 금정굴을 발굴하기 전까지는 경찰과 우익치안대, 태극단에 의해 자행된 고양, 파주 일대의 민간인학살은 전설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이 유골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장담하던 금정굴에서 어린아이, 부녀자를 포함해 최소 153구의 유골이 발굴되었습니다. 고양 파주 지역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피난갈 틈도 없이 인민 치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9·28 수복 직후인 1950년 10~11월 사이에 인민군에게 부역했거나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혐의로 수천 명이 고양 금정굴, 그리고 가까운 강가나 골짜기에 끌려가 불법 학살되었습니다.

47. 죄가 가벼울수록 죽을 확률이 높다니(부역자 재판)

수복 직후 전국 곳곳에서 자행된 부역혐의자 학살의 경우 인민 치하에서 피해를 당하거나 억눌려 있던 사람들에게 의한 보복학살의 성격이 짙었습니다. 때문에 부역 정도가 경미할수록 학살당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일반적으



로 가족을 데리고 월북한 열성 부역자들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으며 단신으로 월북한 경우에는 그 가족이 대살되었습니다. 또 스스로 부역이라고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인민 치하에서 그저 '생존'했을 따름인 많은 이들이 우익에 의해 자의적으로 좌익 혹은 좌익 동조자로 분류되어 군, 면, 리 단위에서 즉결심사 후 학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적 보복이 빈번하게 자행되었고, 이렇게 혐의가 적어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은 사람들이 임의로 학살된 데 반해서, 재판을 받은 부역자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훈방되어 살아남았습니다. 참고로, 서울 지역에서 재판에 회부된 5만 5천여 부역혐의자의 경우, 수복 직후의 광풍 속에서 검거된 160여 명이 사형당했을 뿐 대부분 경미한 형을 살거나 훈방되었습니다.



살인면허 : 작전 지역 내의 모든 인간은 죽여도 좋다

48. 보11사 9연대 작명 제5호(거창산청함양 사건)

1951년 2월 초 거창, 산청, 함양 등 지리산 남부 지역의 공비를 토벌하기 위해 제 11사단 9연대는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합동작전에 돌입했는데 그 명령은 "작전 지역 내 인원은 전원 총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작전으로 공비토벌이라는 명분하에 인근 마을주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렸으며, 2월 8일 산청, 함양 2개군 4개 마을에서 민간인 700여 명이 학살되었고 이어 2월 9일에는 거창 신원면에서 719명이 학살되었습니다.

49. 살려면 모두 나오라더니.....(화순 학살)

1950년 11월 17일 땅거미가 질 무렵 국군 11사단 20연대 소속 군인들이 화순군 남면 다산마을의 마을회관 및 마을 앞 논에서 주민들을 학살하고 1951



년 3월 17일 이른 아침에도 도암면 도장리에서 주민을 학살하는 등, 당시 화순군 일대에서는 통비분자라는 혐의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새벽에 마을로 들이닥친 국군은 가가호호 방문하여 "살려면 모두 나오라."고 한 후 영문을 모른 채 나온 주민들 중 군경가족을 제외한 마을 주민을 무차별 학살했습니다.

50. '학살부대'의 광기(함평 사건)

1950년 12월 6일에서 1951년 1월 12일 사이에 공비 토벌을 목적으로 작전을 벌이던 국군 제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가 함평군 월야, 해보, 나산면 주민 524명을 학살하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마을에 주둔하던 국군은 빨치산과의 교전에서 국군 2명이 사망하자 마을 주민들을 통비분자로 몰아 몰살했습니다. 당시 5중대 연락병이던 이는 빨간 볼펜으로 쓴 "함평군 월야리 양민학살의 건 또또또, 암호명 또또또또, 계속 기적행하리 또또....."와 같은 이상한 편지들을 가끔 유족회로 보내왔다고 합니다. 함평 사건은 4대 국회의 '양민학살진상조사특위'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51. 다도면 소개작전(나주 학살)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는 함평에서 주민들을 학살한 뒤 1951년 1월 20일 영산포를 경유, 나주 세지면으로 진군하여 오봉리 동창교에서 주민 136명을 학살했습니다. 군인들은 노점숙씨가 업고 있던 아기가 울자 당시 8개월 된 아기까지도 썩죽였으며 이어 인근 논밭에서 농사 준비를 하던 주민 40여 명도 모두 총살했습니다. 1951년 2월 26일에는 나주 봉황면 철천리 동박굴재에서 3개 마을 주민이 경찰과 경찰특공대에 학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2. 일본도로 내리치고 기관총을 난사하고(남원 강석리 학살)

제2전선에서 국군 11사단이 저지른 민간인학살의 규모와 잔인성을 보면 이들이 과연 사람이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국군 11사단 205부대의 1개 대대 병력은 1950년 11월 17일 새벽 5시 남원군 대강면 강석리 마을 앞 논바닥에 마을 주민과 피난민 등 500여 명을 모이게 한 뒤, 청장년 남자들은 마을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하고 부녀자는 마을회관 뒤 숲에서 대검으로 난자했으며 노인들은 마을 회관 앞에서 일본도로 목을 쳐 학살했습니다. 3시간 동안 마을 주민 90여 명이 통비분자로 몰려 학살당하고 마을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순창, 고창, 정읍 등지에서도 이런 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53. 영원히 사라져버릴 뻔했던 마을(영암 등 전남 일대)

1950년 7월 13일 영암군 금정 담재에서 200~250명, 10월 17일 구림에서 80여 명, 1950년 12월 18일 연보리 차네골에서 161명 등을 경찰과 국군이 보도연맹원과 부역혐의자라는 이유로 학살했습니다. 차네골에서는 약 200명의 주민 중 30여 명만이 생존했으며 마을은 모두 불탔습니다. 가해 군인들은 “너희들이 빨갱이를 키워 우리 동료가 죽었다.”며 “인민공화국 만세”를 강제로 외치게 한 뒤 학살했습니다. 현재 10여 가구만 남은 차네골에서는 같은 날 모듬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54. 눈 덮인 겨울산에서 쓰러져간 사람들 (불갑산 학살)

1951년 2월 국군은 영광군 불갑산에서 빨치산 소탕작전인 일명 ‘대보름 작전’을 벌이면서 함평, 영광 등지에서 몰려든 주민들을 집단학살했습니다. 불갑산 학살은 불갑면 쌍운리 내산서원 근처 야산에서 유골이 발굴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잔혹한 진실

55. 인민군으로 위장하여 민간인 학살(나주부대-완도 학살)

나주부대가 지나간 길은 학살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주 경찰(일명 나주부대)은 1950년 7월경 퇴각하면서 인민군으로 위장하고 완도 등 전남 서남부 일대에서 민간인 수천 명을 학살했습니다. 1950년 7월 말 인민군의 대공세에 밀려 완도까지 퇴각한 나주부대는 인민군으로 가장한 채 완도중학교에서 환영 나온 주민들을 학살한 것을 시작으로 사안, 황간, 신지, 노화, 청산, 보길도 등지에서 수많은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지역 섬마을들의 제삿날은 한날 한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56. 열 대의 버스에 실려온 사람들(지리산 외공리 학살)

1951년 2월 하순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에 군용트럭을 앞세운 11~14대의 버스가 피난민 행색의 민간인을 가득 태워왔습니다. 군인들은 이들을 소정골 앞 골짜기로 끌고가 구덩이 앞에 한 사람씩 세워 학살했습니다. 이렇게 학



살된 수는 최소 400명으로 추정됩니다. 외공리 학살은 타지에서 끌려온 사람들도 생존자가 한 사람도 없어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지만 1999년 일부 유골 발굴시에 유류품이 함께 나와 진상파악의 단서가 생겼습니다.

57. 황해도 신천 학살

북한 지역에서는 인민군 퇴각시 인민군에 의한 우익인사 학살, 미군의 무차별 폭격에 의한 수십만의 주민 학살, 미군과 국군 진주 이후에 일어난 학살들이 다양하게 일어났는데,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중 1950년 10월 17일부터 12월 7일까지 52일 동안에 황해도 신천에서 부녀자와 어린이를 포함해 무려 3만 5,383명이 미군과 우익청년단에 의해 학살된 신천 학살은 당시 지역사회의 좌우의 대립이 미군 진주 전후에 어떤 양상으로 격화되어 엄청난 비극을 몰고왔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학살 문제 외면하는 우리 사회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

58.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동안 이 문제가 묻혀 있었나요?

전쟁 이후 50년 동안 우리 사회는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의 포로였습니다. 전쟁중에 이유 불문하고 국군이나 미군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빨갱이'로 몰리던 시대였고 한번 '빨갱이'로 낙인찍히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만큼 잔혹한 시절이었습니다. 또한 학살 사실을 발설하는 순간 발설자 역시 똑같은 '빨갱이'로 몰리는 야만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피해자임에도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고 그 한을 가슴에 묻은 채 살아야만 했고, 심지어는 '연좌제'의 피해를 당하면서까지도 오로지 살기 위해서 그 고통스런 기억을 머리 속에서 지우거나 야만의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기억을 재구성해야만 했습니다. 사건을 목격한 이웃들 역시 눈이 있어도 못 본 척,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하는 삶을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사건은 서서히 수면 아래로 묻혀갔고, 우리 사회는 커다란 종양을 안은 채 병적인 상태를 유지해오면서 계속되는 국가폭력과 인권유린, 무관심과 이기주의와 냉소 등, 온갖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전쟁기의 100만 민간인학살 문제는 더욱더 사회의 금기가 되었고, 언론도 학자들도 심지어는 사회운동가들까지도 문제를 외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마침내 학살은 없던 일이 되었고, 사라진 100만의 고귀한 생명은 기록 속에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부존재'가 되었습니다.

59. 피해자임에도 연좌제의 고통을 당했다니.....

이승만 독재정권은 권력을 장악, 유지하기 위해 무수한 국민을 학살했고 이후 들어선 군사독재정권들도 공포정치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면서 학살 사실을 은폐해왔으며, 연좌제까지 만들어 유족들의 공직 진출이나 해외 이주를 막았습니다. 이런 폭압적인 사회에서 피해 유족들은 아이러니하



제도 생존을 위해 선거 때면 보지도 않고 줄곧 '빈민'만 찍는 파탄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고통 어린 반세기를 살아온 유족들은 당시를 증언하며 "내 나이 열두 살로 돌려달라."고 호느끼곤 합니다. 이렇듯 피해를 입고도 그 사실을 속 시원하게 토로조차 하지 못했던 유족들의 삶은 사실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60. 유족회는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했나요?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전국의 유족들은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학살자 처단 등을 요구하며 유족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경남의 동래, 진영, 마산, 창원, 김해, 금창, 밀양, 함양, 경북의 문경, 경산, 경주, 대구 등지에서 피학살자 유족회가 결성되었고, 1960년 6월 16일에는 경북을 포괄하는 '경북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가, 8월 28일에는 '경남지구피학살자유족연합회'가 결성되었으며, 10월 20일에는 서울 종로의 전 자유당 회의실에서 경상남북도의 시군 유족회 대표 50여 명이 모여 '전국유족회'를 창립했습니다. 유족회는 유골을 발굴하여 합동묘역을 조성하고 지역별로 합동위령제를 지내는 한편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 각 기관과 국회 등에 청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1960년 4대 국회는 '양민학살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학살사건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1. 1960년에 이미 국회에서 민간인학살 사건을 조사했다는 말인가요?

유족들의 진상조사 요구가 높아지고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자 1960년 5월 23일 제4대 국회 제19차 본회의에서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반, 경북반, 전남반으로 나누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위는 1960년 5월 31일부터 11일 동안 현장을 조사한 후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을 포함한 '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에는 경남의 거창, 거제, 함양, 동래, 산청, 울산, 충무, 구포, 마산, 산청 등지에서 3,085명, 경



북의 대구시 일대, 대구 형무소, 문경 등에서 2,200명, 전남 함평군에서 524명, 전북 순창군에서 1,028명, 제주도에에서 1,878명 등 총 8,715명의 양민이 학살됐고 1만 41호의 가옥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마저도 전체 피해의 일부만을 조사한 것에 불과해 피해 신고가 증가일로에 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4대 국회는 내무·법무·국방의 3부 장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신중하게 토의한 결과, 이를 행정부에 이관하여 장시일에 걸쳐 정확하고 상세한 실정을 조사토록 결의했습니다.

62. 국회에서 조사한 사건에 대해 왜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나요?

1961년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진상규명은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반공을 제1의 국시로 삼고 반공 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는 혁명공약을 내세운 5·16쿠데타 정권은 극우반공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유족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을 만들어 피학살자 유족회 간부들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하여 복수를 이롭게 하고 좌익용공의식을 고취했다는 이유로 8개 유족회 간부 27명에 대해 사형, 무기 등 중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특수반국가행위' 죄를 적용하여 사형 1명, 징역 15~5년 12명 등을 선고했습니다.

63. 유족회 활동이 '이적 행위'였다니 놀랍습니다.

당시 재판에 회부된 유족회 간부들은 '이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최고 사형까지 언도받았습니다. 게다가 유족들을 검거하면서 유골발굴일지와 유골 수집철, 피학살자 조사명부, 유족회원 가입명단, 학살자 고발장, 유골 상

자 등 학살 진상규명에 결정적 단서가 될 관련 기록물들을 남김없이 압수, 폐기하여(5·16 군사정부 포고령 제18호) 이후의 학살 진상조사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또 피학살자들의 합동 무덤을 파헤쳐 유골을 불사르거나 바다에 내다 버리고 비석을 뽑아 부수는 부관참시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로써 민간인학살은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금기가 되었고, 1987년 이후까지 진실이 은폐된 채 강요된 침묵의 세월이 계속되었습니다.

64. 지금도 유족회가 활동중인가요?

1987년 이후 민주화의 열기를 타고 유족들이 드디어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활동중인 30여 개 유족회는 1987년부터 1990년대 사이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각지의 유족회는 지방의회, 국회, 청와대 등에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청원과 진정을 수없이 내며 지역에서 합동위령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또 흩어진 유족들을 찾고 학살지를 추적하는 등 학살의 증거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 사건별 유족회가 뜻을 합쳐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전국유족협의회'를 결성하고 전국의 민간인학살 문제를 통합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학살 문제의 해결을 늦추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직무유기

65. 고령인 유족들에게 민간인학살 문제의 해결을 맡길 순 없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반백년 이상의 고통스런 삶을 살아온 유족들에게는 삶 자체가 투쟁이었고, 이제 연로해진 유족들에게 문제의 해결을 맡기는 것은 사회의 직무유기입니다. 다행히도 민간인학살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단체들이 생겨나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 내의 유족회 활동을 지원하고 유족회와 함께 위령제 봉행 등의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로 학살 지역에 근거를 둔 이들 단체는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을 지역문제 해결 차원에서 접근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 또는 전국 단체들과 함께 공동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이들 단체가 모여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66. 학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나선 단체가 많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30여 개 단체가 각 지역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 차원에서 단체들을 규합하여 대책위 등 연대체를 구성, 활동하기도 합니다. 이들 단체는 유족들과 함께 지역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민간보고서를 발행하며 대국민 홍보에 힘써 왔습니다. 또 지방의회와 국회, 청와대에 진정, 청원 등을 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나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내 '조사보고서'를 내는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로부터 실태조사 및 위령사업 예산을 지원받는 곳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국 단체들 중에도 문제 해결에 함께 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67.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그동안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전국유족협의회와 전국사회단체협의회, 그리고 관련 연구자와 시민 등 후원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살규명범국민위는 2000년 9월 7일 발족한 이래 지역단체, 유족들과 함께 전국의 학살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모아 전국 학살지도 및 학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영상 홍보물, 선전 책자를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또 민간인학살 문제를 사회의 주요 의제로 만들기 위해 '전쟁과 인권 심포지엄',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합동위령제' 등의 사업을 펼쳐왔고, 국가가 책임 있게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전국의 유족들과 함께 장기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법안 토론회 및 공청회를 수 차례 여는 등, 전국 통합특별법 제정 사업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습니다.

68. 조사보고서를 낸 지방의회는 많이 있나요?

1994년 전북도의회에서 처음 지역 조사보고서를 낸 이후로 거창군의회, 경기도의회, 경북도의회, 경산시의회, 산청군의회, 익산시의회, 함평군의회, 화순군의회 등에서 지역민들이 제기한 학살 피해를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냈습니다. 지방의회에서는 자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현장을 방문하고 유족 및 목격자의 증언을 채록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사건을 확인한 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위령제 등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국회에 입법 촉구문을 채택, 전달하거나 입법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69.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국방부에서는 1999년 노근리 학살이 내외신에 대서특필된 후 자체 해원사

업으로 전국의 학살사건을 접수받은 적이 있지만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 한해서만 개별법 제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사실상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정부에서도 미국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노근리 사건 해결 후 순차적으로'라는 입장만 내놓고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000년 이후 거창,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만 개별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정치적 미봉으로 일관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3년 학살규명범국민위와 유족들의 강도 높은 농성 투쟁중 정부와 행자부, 국방부 등 각 부처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통합특별법 제정의 기운이 높아졌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끝내 입법이 좌절되었는데, 이번 17대 국회에 들어서서 대통령이 2004년 8·15 경축사를 통해 '포괄적 과거청산' 의지를 밝힘에 따라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등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70. 혹시 민간인학살 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나요?

국군 11사단 9연대 3대대가 1951년 2월 719명의 주민을 학살한 거창 신원면 사건의 경우, 전쟁중인 1951년 12월 16일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주민들을 즉결처분하도록 명령한 명령권자와 그 명령을 수행한 자에 대해 인권을 유린한 죄를 적용하여 법적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다. 9연대장 오익경 대령에게는 무기징역(구형 사형), 3대대장 한동석 소령 징역 10년(구형 사형), 계엄민사부장 김종원 대령 징역 3년(구형 징역 7년) 등 관련 군지휘관에게 실형이 확정되었는데, 이들이 모두 1년 만에 석방된 뒤 경찰 고위 간부 등으로 재기용되어 많은 의혹을 남겼습니다. 이밖에 1950년 7~8월에 일어난 경남 진영 보도연맹 학살 사건의 경우 당시 김병희 진영지서장이 강성갑 목사 학살에 대한 미국 선교단체의 항의로 총살에 처해진 기록이 있긴 하지만, 그 많은 민간인학살의 책임을 물어 처벌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습니다.

71. 정부 부처에 관련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국민보도연맹의 경우 가입원서를 작성했고 명부를 만들어 관리했기 때문에 관련 문서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국방부의 작전일지나 작전명령서, 법무부의 재조사 처리 및 현황 관련 자료 등도 남아 있을 테고, 정부 기록보존소를 뒤진다면 그밖의 다른 관련 자료들도 발견될 것입니다. 다만, 1980년대 초에 당시 내무부에서 국민보도연맹 관련 자료를 모은 적이 있는데 이들 자료가 이후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에 비추어볼 때



자료 수집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민간에서 이들 자료에 접근하기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72. 증언자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 둘 죽어가고 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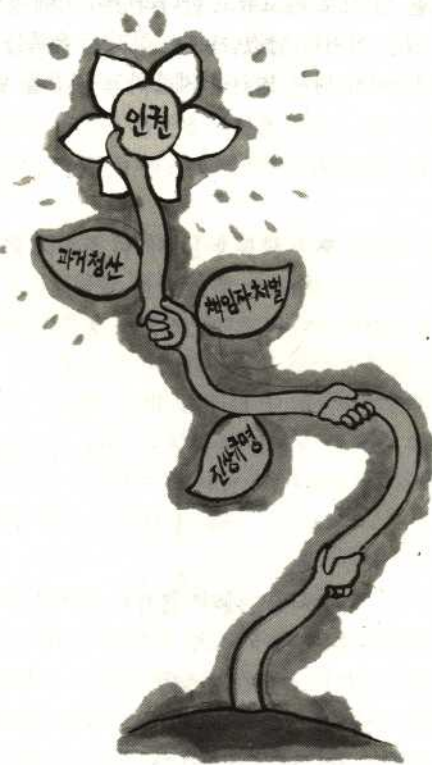
문서자료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 목격자, 관련자의 교차 증언으로 사실을 인정하는 등, 구술 자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돼야 합니다. 증언자가 지금 이 순간도 하나 둘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들의 증언을 한시 바빠, 폭넓게 확보하는 것은 그 끔찍했던 학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필수적입니다.

73. 미군 문서를 통해 노근리 사건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미국측 문서를 찾는 일이 시급하지 않을까요?

미군 작전일지나 일일, 주간보고서 등의 문서자료 중 기밀해제된 자료에서 증거를 찾아낸다면 민간인학살의 진상규명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다만, 미국을 찾아가 그 산더미 같은 자료 중에서 관련 증거를 찾아내는 것은 엄청난 인력과 경비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이는 강력한 조사권한이 있는 국가기구에서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 미국에 자료 협력을 얻어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한국전쟁은 국제전의 성격도 띠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자료, 중국, 일본 등 관련 국가의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조사기구와 조사권한이 필요합니다.

74. 여러 사건 중에 제주 4·3사건은 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사과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라도 해결된 사례가 많이 있나요?

100만의 피해자를 낸 민간인학살 중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은 거창 신원면 사건,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이렇게 단 3건뿐입니다. 이중 거창 사건은 진상조사 없이 명예회복법을 제정하여 위령사업을 진행한 경우고, 제주 4·3사건은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등의 성과는 있었지만 조사기구의 권한이 작았고 또 관련집단의 집요한 문제제기 등으로 말미암아 진상규명이 미흡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노근리 사건은 한미합동조사 후 보고서를 발간하고 클린턴 미 대통령이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진 못했고 후속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75. 현재 법이 제정되지 않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어려움이 있는 많은 사건들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학살은 특정 지역, 특정 시기의 사건을 밝혀내는 것만으로는 그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전국적이고 종합적인 진상조사를 통해서만 진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살규명범국민위와 유족들은 사건별 입법에서 방향을 전환하여 전국통합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물론 입법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의 뒷받침 없이 문제를 푸는 데는 한계가 명백한 현실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법제정은 그 일차적 과제였습니다. 통합법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행자위, 법사위를 모두 통과하고 2004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몇몇 우익단체와 당시 다수당이던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통합특별법의 목적이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려는 것이고, 또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며 이런 비극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임에도 우익단체는 통합특별법을 '나라 혼드는 법'으로 매도했고 한나라당이 이에 동조하여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유족들과 사회단체들은 17대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다시 법안을 제출하고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의 부정

76. 전쟁이나 민간인학살이 일어난 곳이 우리 나라만은 아닐텐데요, 집단학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2차대전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집단학살을 비롯한 전쟁범죄를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그 처벌 및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48년 12월 UN 총회에서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제노사이드 협약)"을 승인했는데, 이에 따르면 "집단살해는 국민적, 인종적, 민족적, 종교적 집단의 전부 혹은 일부를 파괴, 절멸할 의도로 행하는 행위"입니다. 한국전쟁전후의 민간인학살은 대체로 정치적 학살(political massacre)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당시 남쪽 사회의 지배집단이던 우익세력의 입장에서 '빨갱이'는 거의 인종이나 종교 집단에 가까운 규정이었습니다. 또한 미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은 사실 인종적 편견에 입각한 집단학살(genocide)이었습니다.

77. 집단학살 문제 해결과 과거청산에 관한 국제 규범이 있나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해결 사례 중 거창 사건은 진상규명 없는 보상에 그쳤고 5·18민주화운동 또한 보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제시하는 과거청산의 기본원칙은 1) 진상규명 2)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3) 가해자의 사죄와 처벌 4) 배상 5) 재발방지책 마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진실규명 없이 정치적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피해자와 유족의 신원은 물론 재발방지책 마련 등 사회적 환기의 기능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78. 외국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없나요?

국제사회는 제노사이드 협약을 맺고 국제형사재판소를 설치하는 등 전쟁범죄 및 집단학살죄의 처벌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사례도 있고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제사회도 협의와 연대를 통해 이런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국민국가에서 국내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훨씬 구속력이 강합니다. 2차대전 이후 각 나라는 각국의 현실에 맞게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각 나라의 정치상황과 민주주의 성숙도에 따라 전개되는 양상은 각기 다릅니다. 해외의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향후 우리 나라의 민간 인학살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9. 평생을 쫓기는 전범들, 나치 전범재판

독일에서는 히틀러의 나치 시대를 반성하고 그 과오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차대전 직후 뉘른베르크 재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적, 인적 청산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이후 전세계가 냉전체제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청산이 완료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공소시효를 없애고 지금까지도 나치 전범을 색출하여 법정에 세우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학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0. 제주 4·3사건 해결의 모델이 된 대만 2·28사건

2·28사건은 중국 공산당에 쫓겨 대만으로 밀려난 국민당 정부군이 1947년 2월 28일부터 타이베이를 비롯한 대만 전역에서 수십만의 무고한 원주민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반세기 가까운 철권통치 기간동안 이 사건은 입 밖에도 내는 것조차 금기가 되었는데, 1987년 계엄 해제 후 국민들의 사건 진상규명 요구에 정부가 행정원 산하에 조사위원회를 두어 진상을 조사한 뒤 1992년 말 최종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사건발생 48년 만에 리덩후이 총통이 국가수반으로서 유족들에게 사죄했고 대만 의회에서는 보상법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2월 28일을 '평화의 날'로 제정하고 타이베이 공원에 위령비를 세우는 등 홍보, 고증, 기념관 건립 등의 후속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81. 영국에서 체포된 칠레의 피노체트

1973년 9월 11일 피노체트의 칠레 군부세력은 미국의 지원하에 아옌데 민주정부를 무력으로 전복하고 일주일간 3만 명의 시민과 인민연합 지지자들을 학살하며 집권한 뒤, 이른바 '콘도르 작전'을 통해 진보 인사들을 납치, 구금, 살해, 암매장하여 수천 명을 사망, 실종시키고 10만 명을 고문 후유증에 시달리게 했으며 100만 명을 해외로 내몰고 망명인사를 추적해 암살까지 했습니다. 민정이양 후 피노체트는 1973년부터 89년까지의 군사통치 기간에 일어난 80여 건의 스페인인 피살·실종사건으로 1998년 스페인의 가르손 판사에 의해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고,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요양차가 있던 영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피노체트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국 스페인이 아닌 본국 칠레로 인도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칠레에서는 2004년 '정치범과 고문에 관한 국가조사위원회'에서 피노체트 시절의 고문 사례에 관한 보고서를 냈는데, 종신 상원의원의 자격을 가진 피노체트에게 어떤 처벌이 가해질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82. 5월 광장의 어머니, 아르헨티나의 과거청산

아르헨티나의 '추악한 전쟁'은 1976년 3월 24일 쿠데타로 집권한 아르헨



티나 군사 정권이 좌익 게릴라 소탕이라는 명분하에 1983년까지 8년 동안 무제한의 국가폭력을 동원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체포, 납치, 구금, 고문, 사살, 처형한 사건입니다.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에 희생된 사람은 실종 3만 명, 강제 입양 500명, 정치범 1만 명이며, 정치적 망명자도 30만에 달합니다. 무장 게릴라 단체의 산발적 저항은 이내 진압되었고 그 누구도 '추악한 전쟁'에 대해 언급도 못하는 공포 상태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실종되었습니다. 1977년 4월 13일 실종된 자식의 행방을 찾으려는 어머니 14명이 대통령궁 앞 '5월 광장'에 모였고 이후 매주 목요일에 침묵시위를 펼치면서 '5월 광장의 어머니'는 계속 늘어갔습니다. 1983년 선거에서 당선된 알폰신 대통령은 '실종자 조사 국가위원회'를 설치하여 군사독재 기간의 범죄행위를 조사했으나 정치적 타협으로 전모를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정치적 타협에 분노하는 5월 광장 어머니들의 시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83. 프랑코 독재 이후 민주주의 이행 과정에서의 스페인의 과거청산

스페인 내전 이후 집권한 프랑코 정권은 철권통치로 국민들을 억압하면서 파시스트 정당, 군대, 가톨릭 교회 등의 지원을 받으며 군림했습니다. 1975년 프랑코 사망 이후의 민주주의 이행은 구체제 세력의 한 부류인 온건 개혁파가 좌파의 협력을 받아가며 변화를 만들어가는 식이어서 정치적 타협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페인 국민은 1982년 군부 쿠데타를 하루 만에 일축하며 민주적 의회와 정부를 되찾았으나 과거는 '망각' 속에 모두 묻어버리자는 타협적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다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일고 있습니다.

84. 남아공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년부터 1994년까지 소수의 백인이 인종차별 정책을 펴며 다수의 흑인과 혼혈인, 인도인, 아시아인 등을 분할 지배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공식 통치이념이었습니다. 1995년에 구성된 '진실과 화해 위원회'는 '보복없는 과거청산'을 기치로 1960년부터 1993년 12월 전인종 선거를 규정한 잠정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자행된 국가범죄와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했습니다. 남아공의 사례는 지나치게 화해에 치우친 면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백인 지배세력의 잘못은 물론 아프리카민족주의자나 해방세력의 과오까지 조사하는 등 독립적이고 강력한 국가기구에서 철저한 진실규명 작업을 추진하여 공정한 과거청산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85. 과거청산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과거청산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오늘의 우리 사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의 투투 대주교는 "망각에서 재생산된 불의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는 안정될 수 없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과거는 되풀이된다."는 금언의 진실됨은 지난 우리 역사와 오늘의 사회 현실, 그리고 이웃 일본의 역사와 현실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분명해집니다. 과거청산은 현재 우리 사회의 구조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제입니다.

86. 우리 나라의 과거청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는 식민지배, 전쟁, 군사독재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냉전시기와 맞물린 오랜 군사독재 기간으로 말미암아 이전 시기의 잘못을 청산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청산해야 할 과제를 계속 덧쌓아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타협과 망각으로 똑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할 것인가, 과거의 잘못을 씻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청산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명령입니다. 국민적 합의 속에 국가가 공식적으로 과거청산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과거청산은 시대의 명령

87.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이 중요한 문제긴 하지만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과정에서 소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충격이 있기도 할 테고, 이의 해결방안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활발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터져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생성되는 긍정적인 에너지이지 일각에서 주장하는 퇴행은 결코 아닙니다. 상처는 드러내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숨기기에만 급급하다면 풀아터질 수 밖에 없습니다.

88.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과거청산'에 민간인학살 문제도 포함되나요?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은 참으로 많은 질곡을 헤쳐왔습니다. 과거청산의 주요 과제는 일제강점기의 친일과 강제동원, 한국전쟁기의 민간인학살,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탄압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친일잔재를 청소하고 일제강점기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해방과 전쟁, 국가형성기에 발생한 민간인학살의 진실찾기, 또 군사독재정권의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발생한 무수한 인권탄압 및 조작의혹 사건과 아직까지도 꼬리를 물고 있는 군의문사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이 과거청산의 주요 과제들입니다.

89. 학자들의 연구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연구 차원의 '현대사 조사' 방식은 사실상 '과거청산'을 하지 말자는 말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조사권한과 정부 각 기관의 협조 없이는 진실을 밝힐 수도 없고,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아온 피해 국민의 구제 장치도 만들 수 없습니다. 또한 과거청산의 또 다른 목적인 잘못된 공권력의 자기 반성의 기회, 즉 국가가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공권력을 불법 행사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과거를 반성하며 자기 정화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공권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신은 국가가 공권력을 국민 다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자의 편의대로 사용한 과거의 잘못에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친일 인사들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기념관이 세워지는 등 친일잔재가 곳곳에 드리운 오늘의 상황은 조사 연구가 미흡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국가의 공식 조사와 입장이 없는 데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의 뒷받침을 받는 국가기구에서 공식적으로 과거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한 과거청산 방법입니다. 역사적 평가는 그 후의 일이지요.

90.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기구는 어떤 형태가 바람직할까요?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적인 국가기구이거나 대통령 직속인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국회 산하의 기구는 정치권의 정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학술원 산하의 민간기구는 과거청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성될 과거청산 국가기구는 전체를 통괄하는 위원회는 따로 두더라도, 일제강점기 피해,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군사독재정권기의 피해 등 큰 범주별로 독립된 위원회를 두어 강력한 권한을 갖고서 사안별 성격에 맞게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해야만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91. 과거청산 국가기구에는 어떤 권한이 필요한가요?

4. 3위원회나 의문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났듯이 미약한 조사권 한은 자칫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줄 가능성이 높으므로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수사'가 아닌 '조사'임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자료열람권, 압수 수색영장 청구권, 동행명령권, 증거보전 및 증인청구 의뢰권 등이 주어져야 하며, 권한이 훼손당하거나 증인이 요구에 불응할 때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두어야 합니다.

92. 과거청산 국가기구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유족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조사보고서를 발간하여 국가의 공식기록으로 남기고, 피해자의 유골 발굴 및 수습,



피해자에 대한 위령사업과 명예회복 등의 후속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피해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문화 홍보 사업이나 기념 사업도 펼칠 수 있으며 사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도 건의할 수 있습니다.

93.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기구에는 어떤 사람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과거청산 관련 사건들과 그 의미, 해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국민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청산은 이해관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력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다시 쓰는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입니다. 이런 국가적 중대사에 관련 기관이나 정치권에서 몇 명씩 지분을 나누는 식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 분야에서 국민 전체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주도해야만 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94. 과거청산법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겠네요.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 등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이 고통으로 속속 유명을 달리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살아 계신 동안에 시급하게 진상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 진상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증언자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국회는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하루 빨리 법을 제정하여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는 주춧돌을 놓아야 합니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은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

95.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 중에는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거두지도 못하고 정확한 제삿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세기도 더 전에 끌려가 시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는 그 날을 제삿날로 모시고 있는 형편입니다. 유족들은 지난 세월의 고통은 접어두고라도 자신의 부모형제자매가 언제 어떻게 왜 돌아가셨는지 그 사실만이라도 알 수 있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이런 억울함조차 풀어주지 못하는 사회와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학살 영령들의 해원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야만 그 후속조치도 가능합니다.

96. 유족들의 명예회복은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과 유족들의 고통, 그리고 그 파장 등을 감안할 때, 잘못 규정된 피해자들의 법적, 정치적 지위를 회복하고 사회적 오명을 바로 잡는 일 또한 하루 빨리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죄와 가해자의 사죄, 피해 영령과 유족들에 대한 위로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호적 정정 등 개개인의 신원을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97.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등 과거청산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온 국가폭력의 연쇄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청산은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피해 배상과 가해자 처벌이 있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인 조치라도 취해야 합

니다. 그를 통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며 사회적 범례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를 낱말이 공개하여 국민 교육의 장으로 삼는 것도 중요합니다.

98. 법적인 해결이 돼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겠군요?

위령탑 건립, 위령공간 조성, 위령제, 문화행사, 역사관이나 사료관 건립 등 기념사업을 통해 피해자들을 추모하고 학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념사업이 화석화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제도와 문화, 사회 구성원의 의식 속에 살아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차를 타고 찾아가야 하는 거대한 위령탑이나 기념관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 안에 있는 작은 공원 등의 공간을 활용하여 일상적으로 인권과 평화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높이는 형태가 바람직합니다. 또한 유족들의 진상규명 노력도 사회적인 평가를 받아 마땅하고 그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며, 유족들, 특히 어려운 유족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도 각별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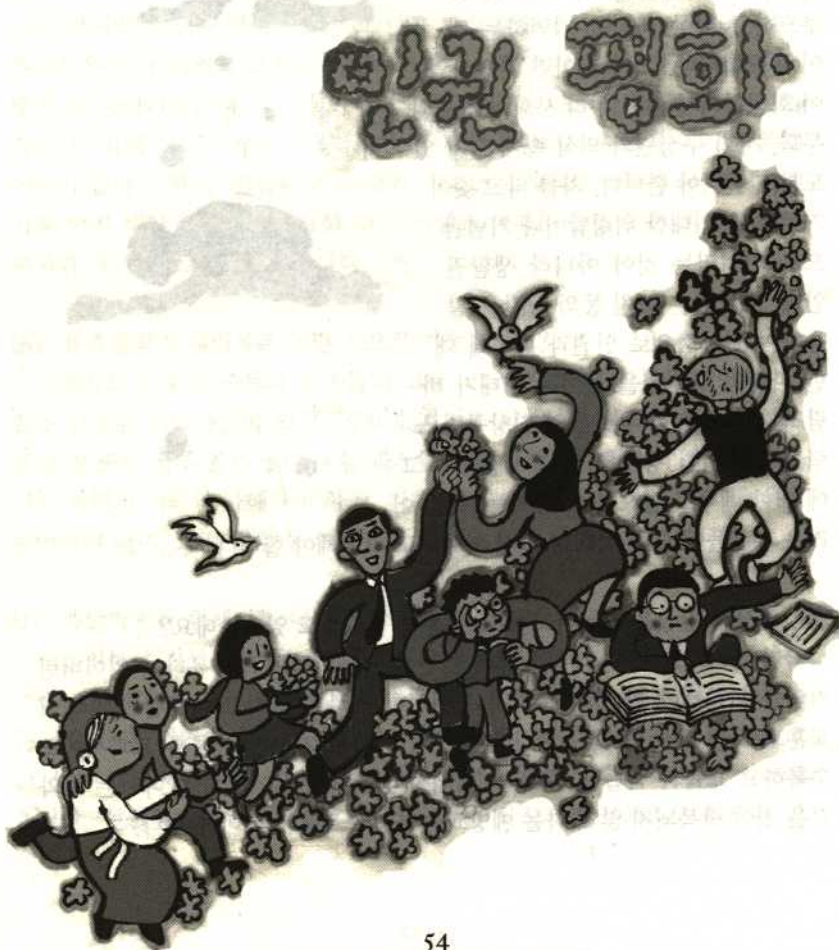
99.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고 후대에 전할 필요성도 있겠는데요?

국가기구의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여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해야 합니다. 숨겨지고 뒤집힌 역사를 밝히고 바로잡아 후대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국가에서 공식 역사로 기록함은 물론 교과서에도 수록하고 교육과 학습을 통해 그 범죄성과 잔혹성을 기억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는 예방교육의 텍스트로 삼아야 합니다.



100.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금 당장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은 학살의 대지 위에 살아남은 유리의 몫입니다. 피해자들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돌고 있고 유족들은 통한을 가슴에 품은 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풀지 못한 한을 가슴에 품은 채 세상을 등지는 사람이 없도록, 차마 토로하지 못할 반인륜적인 범죄를 합리화하고자 한평생 몸부림치는 사람이 없도록,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하며 인간성을 잃어가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 우리가 나서서 잃어버린 역사와 사회정의를 복원해야 합니다. 민간인학살 진상규명과 과거청산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변에 널리 알리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해주시시오. 또 이후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서 함께 해주시시오.



부록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인권평화운동이 활발해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하면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에 뜻을 같이 하는 유족, 사회단체, 학자, 변호사, 종교인, 일반 시민 등이 2000년 9월 7일 한자리에 모여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를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 역사가 바로 서고 인권과 평화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 지역별 유족회를 조직, 강화하고 위령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학술 발표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학살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지역별 학살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민간인학살 입문서를 발행하는 등 출판, 문화 사업 등을 통해 민간인학살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진상규명 활동일지

2000년

- 06. 21. “2000 전쟁과 인권 : 심포지엄” 개최
- 07. 27. “국방부의 민간인학살 진상조사 은폐·조작 시도 규탄” 기자회견
- 09. 07. 위원회 창립 총회 및 전국유족협의회 결성식
- 11. 25. “민간인학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공청회” 개최

2001년

- 05. 23. “민간인학살 특별법 국회 공청회” 개최
- 06. 27. “2001 전쟁과 인권 : 심포지엄” 개최
- 09. 06.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 통합특별법 발의” 기자회견
- 11. 05. 여의도 공원에서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 합동위령제
- 11. 05~12. 21.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유족회 농성

2002년

- 07. 04. "2002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개최
- 08. 29.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전국사회단체협의회" 발족
- 08. 29~10. 31. "통합특별법 제정 촉구 서울역 목요캠페인" 진행
- 11. 07.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여의도 결의대회" 개최

2003년

- 01. 30. 민간인학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 1차 집단 진정
- 02. 23~24. 전국유족, 활동가 수련회
- 02. 27.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를 위한 무기한 농성 돌입(국가인권 위 11층)
- 02. 28. 국가인권위 2차 유족 집단 진정
- 03. 25. 국가인권위 3차 유족 집단 진정
- 04. 03~06. 19. 통합특별법 쟁취 대국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국회 앞 노숙농성 돌 입(한나라당사 앞, 114일간)
- 05. 23.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완전 쟁취를 위한 전국유족 및 사회단체 총력투쟁대회
- 06. 17. "2003 한국전쟁전후 피학살자 유족 증언대회" 개최
- 11. 26. 국회 과거사특위 주최 민간인학살 관련 법안 공청회
- 12. 19. 통합특별법 완전쟁취대회 개최

2004년

- 02. 02.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내 공청회 개최
- 02. 13. 반인권, 반역사 한나라당 규탄 및 통합특별법 쟁취대회 개최
- 02. 27. 한나라당 규탄 및 통합특별법 완전쟁취를 위한 총력투쟁대회
- 03. 26. 범국민위 전국유족협의회 재창립식 및 1차 총회
- 03. 29. 과거사 청산 디딤돌 걸림돌 국회의원 발표 기자회견
- 06. 08.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 안' 민간공청회
- 06. 18. 17대 국회의원 102인 공동발의로 통합특별법 제출
- 07. 24.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기금마련을 위한 문제 재의진 서각전
- 08. 15. 노무현 대통령, 포괄적 과거청산 의지 표명
- 09. 03.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 발족 및 심포지엄
- 09. 25. 과거청산 입법을 위한 추석 선전전
- 10. 15. 민간인학살 문제 완전해결 촉구 전국유족대회
- 11. 05. 과거청산을 위한 피해자 전국합동위령제
- 11. 09.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공식 발족 및 국회 앞 농성 돌입